

낙태죄 폐지될까?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유지를 바라는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 작년 11월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제269·270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 앞에는 각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의견이 엇갈려 왔다. 특히 낙태 금지가 낙태율 감소와 직결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이 2005년 34만2,000여건에서 2010년 16만9,000여건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 의사사회가 지난해 초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3,000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당국이 조사한 수치보다 약 3배가량이 높다.

외국의 사례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여성민우회 흥연지 활동가는 "낙태가 금지된 나라들도 낙태율이 감소하지 않고 활발히 이뤄졌다. 반대로 낙태를 허용한 나라에서의 낙태율이 증가하지 않

은 사례가 있다. 낙태 금지 여부가 낙태율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증거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인공임신중절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허용근거가 폭넓은 국가일수록 인공임신중절이 안전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1997년 이후 스위스, 포르투갈, 대만 등 17개 국가의 허용사례를 들었다.

낙태의 허용근거가 폭넓은 네덜란드는 낙태율이 인구 1,000명당 8.5명(2013년)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 또 네덜란드와 비슷한 미국의 경우에도 15.9명(2013년), 프랑스 14.5명(2012년) 등으로 나타났다. 허용근거가 엄격한 한국보다 낙태율이 현저히 낮았다.

노인 10명 중 9명 "연명치료 반대"

한국 노인 10명중 9명꼴로 노인기준을 '70세 이상' 이라고 인식하며, 암 등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 299명을 대상으로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보니 이같이 나왔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2017년)는 2008년, 2011년, 2014년에 이어 네번째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86.3%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기준으로 '70~74세' (59.4%), '75~79세' (14.8%), '80세 이상' (12.1%) 등이었다.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 나이 기준은 대체로 높아지고 있다.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인식은 2008년 68.3%에서 2011년 83.7%로 꺾중 뛰었다가 2014년 78.3%로 줄어들었지만, 2017년 86.3%로 다시 상승했다.

또 연명치료를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 91.8%의 노인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었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되고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자동차를 모는 노인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 10명 중 2명꼴로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인 노인의 11.1%는 시력과 판단력, 반응속도 저하 등으로 운전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노인 10명 중 7명꼴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에 중립 또는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때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 (86.6%)을 '운임을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 (67.1%)보다 선호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